

# “축산업, 현실적 피해규모 재산정돼야”

- 농경연,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 토론회' 개최

- 홍보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앞서 국내 양돈산업 등 농업부문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규모 재산정과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는 지난 5월 29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조정정책국장이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농경연 김종호 박사는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란 주제를 발표했다.

##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 뒷받침 절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FTA로 인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양돈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협회 자체 조사 결과 연간 1조원이 넘는 양돈산업 피해액이 나왔는데도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1,500여억원의 생산액 감소는 납득이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양돈산업 등 피해규모가 정확히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아직까지 양돈업계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종축기반 확립, 분뇨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또한 유제품 생산액 감소액 자체 추정치와 국책연구기관 감소액 추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규모 재산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회장은 “낙농분야는 무엇보다 전국단위집유체계 일원화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육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분야는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미 FTA 이후 한우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통구조 개선”이라며 “한우가 한우로 팔리고 수입육이 수입육으로 팔릴 수 있는 유통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 회장은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2백만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우 자체가 브랜드라며 정부의 브랜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단계부터 시작하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축산업 생산유발 효과 커... 연계산업 피해까지 고려해야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축산업은 농업 중에서도 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까지 감안한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축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농업관련기관은 산업의 성장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부, 농진청, 농경연, 농업기술센터 등에 축산 전문가들을 더욱 확대 배치시켜 축산분야 지원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FTA 대책, 정부의지 후퇴하나?

#### 소득보전·폐업 지원약속 불투명·축산 지원입법 현안도 제자리 걸음

한·미FTA 타결 직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특단의 정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를 해놓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비롯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폐업지원금의 경우 극히 일부에만 적용될 것임을 전제하는 한편, 축사시설 자금 지원의 경우도 이미 부채가 있는 농가에서는 담보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나 다

름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EU 등 FTA 체결국이나 체결예정국 모두가 축산업 강국임을 지적하고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축세 폐지, 축산물 수입관세액의 축산분야 지원, 생산이력제 전면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현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의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정책의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발표될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동**